



“한화오션 원청 나서야 해 넘긴 하청노동자 교섭 끝나” 조선하청지회, 본사 상경 농성 돌입 ... ‘건강 악화’ 강인석 부지회장 단식 중단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2024년 단체교섭 타결 등을 요구하며 본사 농성을 시작했다.

금속노조와 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 원청이 하청지회와의 2024년 단체교섭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를 촉구하며 서울 본사 농성에 들어간다” 라고 밝혔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한화오션과 하청지회 단체교섭이 결국 해를 넘겼다” 라며 “한화오션 노동자들이 단체교섭 개시와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데도 사측은 모르쇠, 무책임으로 일관한다” 라고 한화그룹과 한화오션 원청을 비판했다.

장창열 위원장은 “한화오션 사측은 노동자가 성실 교섭을 외치면서 50일 가까이 밥을 굶어도 무시했다. 농성장 천막을 뺏고 전기를 끊었다” 라며 “당장 해결책을 갖고 교섭에 나와 사용자 책임과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거동고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지회는 한화오션 19곳 하청업체 사용자들과의 단체교섭을 중단했다. 사용자들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지회는 단체교섭 연내 타결을 주장하며 11월 1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 내 농성장을 차렸다. 강인석 부지회장은 같은 달 20일부터 곡기를 끊고 농성을 이어왔다.

5개월 만인 12월 23일 교섭이 다시 열렸다. 노사 대표들은 네 차례 만났으나 교섭 재개 닷새 만에 다시 결렬. 하청업체 사용자들은 지회의 단체교섭 요구안 28개 중 단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지회는 2024년 단체교섭의 빠른 마무리를 거듭 촉구했다. 김형수 지회장은 “원청 결정 없이 하청업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작년 교섭에서 재차 확인했다” 라며 “진짜 사장 한화오션이 결단해야 끝날 일” 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형수 지회장은 한화오션 원청을 향해 2024년 단체교섭 마무리와 함께 ▲상용직 고용 확대·임금인상·처우개선 약속 이행 ▲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 폐기 ▲470억 손배소송 취하 등을 요구했다. 또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2022년 조선하청지회 파업 불법개입,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헐값 인수 특혜 등을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단식 49일째를 맞은 강인석 거동고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도 함께했다. 강인석 부지회장은 “건강 악화를 걱정하는 동지들 만류에 오늘로 단식을 중단하지만, 한화 자본에 대한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라며 “병원 치료 잘 받고 바로 본사 농성장으로 돌아오겠다. 조선소 하청노동자 투쟁에 많은 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고 호소했다.

지회 투쟁과 국회·시민사회 요구 등으로 1월 10일 교섭이 다시 열렸으나 하청업체 사용자들이 기존 주장만 되풀이, 원활한 교섭 진행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선소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 숙련공 육성이 먼저”

금속노조·조선노연, E-7 비자 확대 연장 반대 ... 급한 불 끄기식 조선업 인력 정책 비판

정부가 조선소 인력 부족의 근본 문제는 외면한 채 다시 이주노동자 확대 카드를 만지고 있다. 조선소 노동자들이 정부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는 8일 오후 울산 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조선소 저임금 고착시키는 E-7 비자 확대 연장 정책을 폐지하고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조선업 인력난을 해결하겠다고며 이주노동자 도입 확대에만 열 올렸다. 2022년 4월 조선소 용접공·도장공의 E-7(특정활동) 비자 조건을 완화하고 규모를 늘렸다. 내국인 고용의 20%, 2023년 1월에는 3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이 한시적 조치를 연장할 모양새라며 반발했다. 지난해 11월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양국 조선업 협력을 도모하자고 말했다며 E-7 비자 할당 인원수(쿼터)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병조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조선소 인력 부족 현상만 앞세우는 정부 태도를 비판했다. 김병조 부위원장은 “정부가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기보다는 급한 불 끄려고 무작정 이주노동자 도입만 확대한다” 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와 조선노연은 조선소 인력 부족 원인으로 ▲다단계 하청구조 ▲고질적인 저임금 ▲고용 불안 ▲위험한 작업 현장 등을 꼽았다. 김병조 부위원장은 “현재 한국 조선소는 숙련공 부족에 시달린다. (2010년대) 조선산업 불황 당시 정부 외

면 속에 사용자들이 숙련노동자를 대거 정리하고 했던 결과”라며 “조선업 호황이 왔지만 버림받았던 숙련공들이 여전히 위험하고 불안정한 조선소로 다시 돌아오겠다” 라고 반문했다.



김병조 부위원장은 “정부와 사용자들이 이주노동자로 인력 공백만 메우는 셈”이라며 “저임금 구조를 고착시키고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조선소 모든 노동자가 더 위험한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호선 현대중공업지부장은 허술한 조선업 인력 운영으로 이주노동자들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백호선 지부장은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만 31개국 노동자 4천5백여 명이 일한다.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끼리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숙식비, 취업 알선비를 충당하느라 잔업·특근 등 장시간 노동을 계속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와 사용자들을 향해 E-7 비자 확대 연장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조선소 다단계 하청구조 해소 ▲숙련노동자 육성 정책 마련 ▲저임금 해결 ▲조선산업 미래 발전 노·정 논의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